

일반 논문

남한·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

: 통독 사례와의 비교

김병연 (서울대)**

정승호 (인천대) · 김성희 (수원대)***

국문요약

이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및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와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자료를 이용하여 남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동독과 서독 주민의 국민정체성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이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은 동서독 주민에 비해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모두 강조하는 혼합형(Mixed)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국민정체성에 있어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도 존재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시민형 비중이 낮고, 종족형 비중이 더 높다. 또한 동서독에 있어

* 이 연구는 2020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입니다. 이 연구를 지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해 자문과 조언을 해 준 강영호, 송영훈 교수, 김규철, 김민정, 이종규 박사, 또 연구 조교로 수고한 조용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kimsh@suwon.ac.kr)

서의 국민정체성의 차이는 통일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동독지역 주민의 시민적 요인 수준이 서독 수준으로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정체성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민적 요인이 강할수록 '통일의 필요', '통일의 집단이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반면 종족적 요인은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제어: 국민정체성, 시민적 요인, 종족적 요인, 통일

I. 서론

남북 주민이 한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통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독일도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주민의 정체성의 수렴을 사회통합의 핵심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헌법애국심(*Verfassungspatriotismus*)을 강조하였다(Bohrer, 1991; Barnard, 2008).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 구성원들이 '누가 국민인가'를 규정하는 자기인식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국민됨의 자격요건)'으로 정의된다(Brubaker, 1992).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국민정체성을 종족적 요인(ethnic factor)과 시민적 요인(civic factor)으로 흔히 구분한다(Brubaker, 1992; Greenfeld, 1992; Greenfeld and Chirot, 1994). 종족적 요인은 동일 조상의 후손이라는 혈연관계, 전통과 문화적 유산, 공동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집단적 기억 공유를 중시하며, 이를 공유한 사람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수용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는 혈통, 출생 등 생득적 요인에 의해 구성된다는 믿음이다. 반면 시민적 요인은 국가를 법적·제도적 공동체로 이해한다. 이 경우 공동체는 '정치제도와 법의 존중', '통일 언어의 사용'과 같이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선택으로 획득 가능하다고 믿는다.

한국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을 단일 민족에서 찾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논의가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다. 현재 한국 통일교육의 주목적 중 하나가 민족공동체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며(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1항), 한국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을 아우르는 단일 민족국가 형성이 한국 사회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간주되어 왔다(Shin, 2006). 그러나 국민 의식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최근 통일의식과 관련된 각종 설문조사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이 그 예이다(Campbell, 2015; Campbell, 2016; 김병연, 2019). 더 나아가 혈통과 출생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오히려 통일에 반대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Ha and Jang, 2016). 또한 국내적으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유입의 급증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강조되어, 민족을 강조하는 기존 담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정체성이란 틀(framework)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민정체성을 분석하고, 이를 독일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적용할 함의점을 찾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남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동서독 주민 등 4개 집단의 국민정체성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¹⁾ 이를 위해 먼저 남북한 주민이 국민정체성의 구성 요인 중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석하고, 이 이해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그리고 동일한 민족국가였다가 분단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동서독 주민의 국민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통독 이후 장기적인 동

1) 북한이탈주민도 남한 주민에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남한에서 태어난 주민을 남한 출신 주민 혹은 남한 주민으로,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표기한다.

서독 주민의 국민정체성 변화는 통일 과정에서 한반도의 국민정체성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정체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족적 요인을 우선시하는 공동체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그 밖의 사람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구성원의 여부는 획득된 것보다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유연하지 않다. 그 결과 종족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원이 많을수록 해외 이민자의 수용에 소극적일 개연성이 크다. 반면 시민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이민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남북통일이나 대북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 단일 민족이라는 혈연, 그리고 오랫동안 단일 국가로서의 전통과 경험을 공유한 사실은 통일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관점에서 통일이 남한이나 응답자 개인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당위적 관점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면서 남북 주민 사이 전통과 경험의 공유가 희박해진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전쟁을 포함하여 상호 대립적인 관계, 그리고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과 핵 개발 등은 분단 이전, 단일한 국가와 민족으로서의 역사적 경험보다 국민정체성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민정체성에 있어 시민적 요인을 중시하는 관점에 따르면 통일이란 법과 제도의 균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국제수준의 법질서를 수용하며 세계 경제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적 요인을 강조하는 남한 주민은 이상의 변화를 전제한다면 남북 통일이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 주민들이 국민됨의 요건을 어떻게 이해하는

지는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종족적, 시민적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을 국민정체성에 있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통일과 통합 정책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통일 담론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남한 주민의 분석 자료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를 이용한다.²⁾ 북한 주민의 경우 이들을 직접 조사하는 것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자료를 이용한다.³⁾ 한국과 독일 간 국민정체성 분석을 위해서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용한다.⁴⁾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국민정체성의 결정요인 및 국민정체성이 이민의식, 통일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선행문헌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소개하며, 그리고 IV장에서는 동서독 주민, 남한출신 주민, 북한이탈주민 간의 국민정

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서 통일, 북한, 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해 남한 내 여론과 국민 의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는 다음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page/2

3)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부터의 조사에서는 북한을 이탈한지 1년이 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있다. 이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는 다음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nksurvey

4)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ISSP 조사의 간사 기관은 독일의 GESIS(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이다. 이 조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issp.org/menu-top/home/>

체성의 차이와 특징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며, V장에서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이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한다. VI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국민정체성과 통일: 선행 연구

국민정체성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연구 방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민정체성을 국가 수준에서 비교한 국제비교 연구이며, 다음으로 국민정체성 결정요인을 개인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정체성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 예를 들면 반(反)이민이나 통일 정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헌이다.

첫째, 국민정체성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로는 ‘Civic-West/Ethnic-East argument’로 유명한 Kohn(1944)이 대표적이다. Kohn(1944)에 따르면, 강력한 부르주아, 자유주의, 분권화 전통을 가진 서유럽(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과 미국은 시민적 정체성이 강한 반면, 봉건주의와 절대왕정이 오래 지속된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가, 그리고 독일은 종족적 정체성이 강하다. Jeong(2016)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사용하여 한국,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의 국민정체성을 미국, 유럽국가(노르웨이, 스웨덴)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아시아 국가와 미국, 유럽국가 간의 정체성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국가는 상대적으로 종족적 요인이 높고, 미국, 유럽국가들은 시민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의 국민정체성을 연구한 문헌은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장원택(2007), 최현(2007), 윤인진(2010)의 연구에서는 남한 출신 주민의

국민정체성은 종족적 요인보다 시민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인진·송영호(2011)에서는 시민적 요소와 종족적 요소를 교차한 4분형 모형⁵⁾에서 한국은 두 요소를 모두 강조하는 ‘혼합형 유형’에 속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권수현(2016)은 남한 출신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을 분석하면서, 양 집단 모두 시민적 정체성과 종족적 정체성이 함께 높은 경우가 80~90%를 차지한다고 보고한다. 한편 정기선 외(2010)는 시민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시민적 요인/ (시민적 요인 + 종족적 요인))를 나타내는 비율을 토대로 한국은 종족적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남한 출신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 정체성의 구성 요인에 관한 차이도 일부 문헌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정동준 외(2019)에서는 요인 분석을 통해 남한 주민은 ‘한국어 능력’을 인종적 요인에 포함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어 능력’을 시민적 요인에 가까운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의 표준말을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해야 할 시민적 요인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정체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Bonacich(1972), Jones and Smith(2001a), Chai(2001, 2005) 등은 합리적 선택 관점(rational choice perspective)에서 종족적 정체성의

5) 4분형 모델이란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국민정체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Hjern 1998, Heath and Tilley 2005).

〈표〉 종족적, 시민적 요인에 따른 4분형 유형

		시민적 요인	
		강함	약함
종족적 요인	강함	혼합형 (mixed)	종족형 (ethnic)
	약함	시민형 (civic)	다원형 (plural)

출처: Hjerm(1998)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을수록 종족적 정체성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민자와 같은 소수자 집단의 유입으로 노동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 될 것을 예상하여 종족적 정체성을 지지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적 정체성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Bollen and Medrano(1998), Jones and Smith(2001b)는 인지능력모델(Cognitive skills model)로 시민적 요인의 결정요인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높은 교육을 통해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유럽과 같은 더 넓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에 따라 종족보다는 시민적 요인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으며,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 혹은 이주민 신분의 사람들도 종족적 요인보다는 시민적 요인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unovich(2009)는 시민적 요인과 종족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합산형 모형(시민적 요인 + 종족적 요인), 차감형 모형(시민적 요인 - 종족적 요인)을 이용해 개인별 요인이 국민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 수준이 낮으며, 종교 의식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또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일수록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동시에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기선 외(2010), 윤인진 · 송영호(2011)의 남한 주민의 정체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도 기존 문헌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종족적 요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적, 종족적 요인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혼

합형 유형)은 고연령층, 저소득, 저학력 계층에서 더욱 많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권수현·홍은정(2018)은 남한 출신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국민 정체성 결정요인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종족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남한 출신 주민의 경우는 여성의 경우,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경험할수록 종족적 요인의 중요성이 감소했다. 또한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시민적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정체성이 이민, 통일의식 등 다른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헌이다. 국민정체성을 시민적, 종족적으로 구분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종족적 정체성이 반이민 정서와 양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Maddens et al.(2000)은 벨기에에 대한 연구에서 종족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반이민 정서도 강한 것을 발견하였다. Pehrson, Vignoles, and Brown(2009)은 조상 기준(ancestry-based criteria)의 국민정체성을 가질 경험 반이민 편견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Jeong(2016)은 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대만)와 서구 유럽국가(미국, 노르웨이, 스웨덴)의 비교 연구에서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족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반이민 정서가 강한 것을 발견하였다.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에서 Hjerm(1998), Health and Tilley(2005), Kunovich(2009), 윤인진 외(2010) 등은 혼합형(mixed) 유형이나 종족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종족형(ethnic) 유형의 경우, 반이민 정서와 인종 혐오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시민형(civic), 혹은 두 요인이 모두 약한 다원형(plural)의 경우는 이주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a and Jang(2016)은 종족적 정체성이 강해질수록 이민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차감형 변

수(시민적 요인-종족적 요인)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종족적 요인을 증시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며,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Ⅲ. 데이터 소개와 설명

이 연구는 GESIS(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의 ISSP 데이터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한다. ISSP 데이터는 세계 57개 회원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이다. 주요 설문 주제는 정부의 역할, 사회 네트워크, 사회 불평등, 종교, 환경, 보건과 건강, 국민정체성 등을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민정체성’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동서독, 남북한의 종족적/시민적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한다. ‘국민정체성’ 부문 설문조사는 1995년, 2003년, 2013년 등 현재까지 총 3개년도에 걸쳐 시행되었다.⁶⁾ 독일의 경우,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동독주민과 서독주민을 구분하였다.⁷⁾

6) 1995년 설문조사는 26개국을 대상으로 총 30,8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3년에는 35개국 45,993명, 2013년에는 33개국 45,2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7) 통일 이후 동서독 간 이주가 자유로워져서 출신지역과 거주지역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ISSP 데이터에 출신지역 정보가 나와있지 않은 관계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동서독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유사한 설문조사인 독일종합사회조사(ALLBUS) 데이터의 2002년 자료를 보면 동독 출신 주민 중 88%가 동독에 거주하고 서독 출신 주민의 97%가 서독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 방법론으로 인한 오차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설문조사 데이터는 남북한 주민의 종족적/시민적 정체성의 특징을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 데이터는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와 남한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내용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조사에 이외에도 통일의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통일연구원의 ‘KNIU 통일의식조사(부정기)’, KBS의 ‘국민통일의식조사(2010~현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 문항은 통일의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민정체성 문항까지는 포괄하지는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에 북한이탈주민 표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남북한 주민의 의식을 비교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면 서울대 조사는 관련 설문조사 중 가장 긴 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설문 문항 및 대상이 본 연구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서울대 설문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한국 국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 자료이다. 설문 주제는 통일인식, 대북인식, 대북정책 인식, 탈북자 인식, 주변국 관계 인식, 한국 사회 인식 등 총 6개 부문에 걸쳐 70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사람의 구성요소’ 문항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2회 조사되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설문조사 시점부터 1년 이전에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설문내용은 통일인식, 대남인식, 북한실태 변화, 주변국 인식, 남한 적응실태 등 총 5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문항

8) 설문 문구는 다음과 같다.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 ‘통일의식조사’ 문항과 동일하고 2018년 한 해 동안만 조사되었다. 표본 수가 87명에 불과하여 비교 대상인 네 집단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이다.

여러 데이터를 병합하여 사용하는 이 연구의 특성상 국민정체성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ISSP의 국민정체성 모듈에서는 다음 8가지 질문을 통해 국민정체성을 측정한다.⁹⁾

- ① 해당 종족 조상을 두고 있는지 여부의 중요성 [조상]
- ② 해당 국가에서 출생 여부의 중요성 [출생]
- ③ 해당 국가에서 생애 대부분을 살았는지의 중요성 [장기거주]
- ④ 해당 국가의 법과 정치제도에 대한 존중 여부의 중요성 [법, 제도]
- ⑤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는 느끼는 것에 대한 중요성 [감정]
- ⑥ 해당 국가의 문화(종교) 등 생활방식에 대한 중요성 [문화, 종교]
- ⑦ 해당 국가 언어 구사 여부의 중요성 [언어]
- ⑧ 해당 국가 국적소지(시민권) 여부에 대한 중요성 [국적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두 조사에서는 이상의 8가지 질문에 더해, ⑦ 언어와 관련하여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①~③는 종족적 요인으로, ④~⑥까지는 시민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소 논란이 되는 것은 ⑦ 언어, ⑧ 국적소지(시민권)의 분류인데, 이는 연구자에 따라 종족/시민적 요인으로 다르게 분류한다. 다만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⑦ 언어는 시민적 요인, ⑧ 시민권은 종족적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기선 · 이선미, 2011; 권수현 · 홍은정, 2018; Ha and Jang, 2016). 이는 ‘언어’는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성취 가능하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

⁹⁾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네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매우 중요하지 않다(1점)”, “중요하지 않다(2점)”, “중요하다(3점)”, “매우 중요하다(4점)”).

이다. 또한 한국(독일, 일본)과 같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부여할 경우 한국인과 혈연관계가 없을 때는 국적 취득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적'은 종족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다양한 연도의 ISSP,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조사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이들 조사에 공통으로 포함한 설문 문항을 이용한다. 각 설문조사에서 포함된 정체성 문항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ISSP와 통일평화연구원 정체성 문항 비교

	ISSP 1995	ISSP 2003	ISSP 2013	통일평화연구원
1. 조상	-	○	○	○
2. 출생	○	○	○	○
3. 장기거주	○	○	○	○
4. 법, 제도	○	○	○	○
5. 감정	○	○	○	○
6.1 문화, 전통	-	-	-	○
6.2 종교	○	○	○	-
7. 언어	○	○	○	○
8. 국적소지	○	○	○	○

출생, 장기거주, 법, 제도, 감정, 언어, 국적 소지 등 6가지 공통문항을 선행문헌의 분류에 의거하여 <표 2>와 같이 종족적, 시민적 요인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의 적합성 여부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통계적 방법론으로 국민정체성 요인 분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석결과 두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 값이 1 이상으로 나타나 <표 2>와 같은 분류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부록 표 2> 참고).

〈표 2〉 본 연구의 종족적, 시민적 요인 구분

요인	관련 설문 문항
종족적 요인	② 해당 국가에서 출생 여부의 중요성 [출생] ③ 해당 국가에서 생애 대부분을 살았는지의 중요성 [장기거주] ⑧ 해당 국가 국적소지(시민권) 여부에 대한 중요성 [국적소지]
시민적 요인	④ 해당 국가의 법과 정치제도에 대한 존중 여부의 중요성 [법, 제도] ⑤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는 느끼는 것에 대한 중요성 [감정] ⑦ 해당 국가 언어 구사 여부의 중요성 [언어]

IV. 남·북한과 동서독의 국민정체성 비교

1. 한국(남한), 동서독 국민정체성의 국제비교

남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동서독 주민의 4그룹 간 비교에 앞서, 본 절에서는 ISSP 2003년, 2013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남한 주민)과 동서독 주민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 비교 대상 국가는 두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21개국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에서 응답한 개별 문항의 값을 평균하여 국가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 앞 절에서 제시한 시민적, 종족적 요인 구분에 따라 각 요인의 단순 평균한 값 구하고, 그 수치에 근거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한다.

먼저 종족적 요인의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2003년 8위, 2013년 7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동서독 주민은 15위 밖의 낮은 순위를 보였다. 한편 시민적 요인을 중시하는 정도는 세 집단 모두 세계 주요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그룹에 속한다. 동서독의 경우는 양 연도 조사에서 순위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서독 13위→12위,

동독 17→17위), 한국은 2003년 14위에서 2013년 16위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모두 중시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두 요인의 합산 점수 순위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시민적 요인의 순위가 떨어지면서 합산 점수의 순위도 8위에서 10위로 낮아졌다. 반면 동독 주민은 종족적 요인, 서독 주민은 시민적 요인이 각각 증가하면서 두 집단의 합산 점수의 순위도 다소 상승하였다(서독: 18위→15위, 동독: 17위→16위).

마지막으로 종족적 요인과 비교해서 시민적 요인의 강조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 시민적 요인과 종족적 요인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상대적으로 시민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여, 1보다 작을 경우 종족적 요인을 더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조사에서는 세 집단 모두 1점보다 작은 점수를 나타내 종족적 요인이 더 강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2013년에는 1보다 커져서 시민적 요인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종족적 요인보다 시민적 요인이 더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한국은 2003년 16위, 2013년 15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하위권 국가에 속했다. 반면 동서독 모두 10위권 이내 포함되어 평균 이상의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세 집단 중 한국의 경우는 세계적 평균과 비교하여 종족적 요인의 수준은 높고, 시민적 요인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적 요인이 종족적 요인 대비 상대적인 중요성도 비교 대상 국가중 상대적 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비해 동서독의 경우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의 수준이 모두 낮고, 두 요인 가운데에서는 시민적 요인을 더욱 강조하는 정도는 비교국 중 평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0년의 시차를 둔 설문조사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관찰된다.

〈표 3〉 국민정체성 요인별 국제비교

순위	종족적 요인		시민적 요인		시민+종족		시민/종족	
	2003	2013	2003	2013	2003	2013	2003	2013
1	필리핀	필리핀	미국	프랑스	필리핀	필리핀	스웨덴	스웨덴
2	미국	러시아	필리핀	필리핀	미국	러시아	프랑스	프랑스
3	러시아	체코	프랑스	노르웨이	러시아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4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미국	덴마크	미국	덴마크	스위스
5	일본	헝가리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체코	노르웨이	핀란드
6	스페인	영국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서독지역	노르웨이
7	체코	한국	헝가리	영국	프랑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8	한국	아일랜드	러시아	스웨덴	한국	노르웨이	핀란드	서독지역
9	영국	미국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대만
10	덴마크	일본	핀란드	체코	스페인	한국	미국	동독지역
11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러시아	영국	덴마크	동독지역	미국
12	헝가리	프랑스	체코	서독지역	일본	스위스	대만	헝가리
13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서독지역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
14	대만	대만	한국	대만	아일랜드	대만	영국	스페인
15	핀란드	동독지역	스위스	슬로바키아	핀란드	서독지역	체코	한국
16	프랑스	덴마크	대만	한국	대만	동독지역	한국	체코
17	동독지역	스위스	동독지역	동독지역	동독지역	일본	러시아	슬로바키아
18	서독지역	서독지역	스페인	슬로베니아	서독지역	핀란드	스페인	일본
19	스위스	핀란드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웨덴	일본	러시아
20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일본	스위스	슬로베니아	필리핀	필리핀
21	스웨덴	스웨덴	아일랜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

출처: GESIS ISSP 2003, 2013 데이터 토대로 저자 작성.

2 한국과 독일의 국민정체성: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

이 절에서는 ISSP의 1995년, 2003년, 2013년 자료 중 18~65세의 표본, 2018, 2019년의 통일의식조사의 18~65세 표본, 그리고 2018년 북한이탈주민 조사 자료 중 18~65세의 표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네 집단 간의 국민정체성을 비교한다.¹⁰⁾ 다만 집단 간 비교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동서독 주민의 경우 통일된 이후 상황을 측정할 자료이고,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된 자료라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 사회로 이주한 주민으로 북한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인식과는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절에서는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이루는 각 세부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종족적 요인이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앞 절의 국제 비교 결과와도 동일하다. 한편, 시민적 요인은 서독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며 비교적 일정함이 관찰되었다. 동독의 경우는 서독보다 종족적 요인이 90년대에는 높았으나, 현재는 두 지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였다. 서독의 시민적 요인은 동독의 시민적 요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의 분포를 보았을 때, 독일의 경우, 2003년, 2013년에는 응답의 분포가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정규분포에 가깝게 변화하고 있다 (부록 그림1).

<표 4> 독일과 한국의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

국가	1995	2003	2013	2018	1995	2003	2013	2018
	종족적 요인				시민적 요인			
서독지역	2.79	2.8	2.87		3.29	3.26	3.36	
동독지역	2.94	2.86	2.9		3.21	3.18	3.26	
남한 주민		3.14	3.21	3.11*		3.26	3.3	3.29*
북한이탈주민				3.33				3.39

* 남한 주민의 경우 2018년, 2019년 평균값.

출처: GESIS ISSP,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동 기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토대로 저자 작성.

10) 표본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부록의 ISSP 설문문의 통계표 수치(부록 표1)와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 모두 독일인과 남한 주민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 둘 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4점으로 표기)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부록 그림 1, 그림 2). 특히 전체 응답자의 45% 이상이 응답한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의 중요성을 4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종족적, 시민적 요인을 다른 비교 그룹에 비해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북한을 자발적으로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한 사실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종족적 요인 측면에서는 남북한 주민은 인종적, 역사적으로 한 국가, 한 민족이라는 인식에 더 강하게 동의할 뿐 아니라 시민적 요인 면에서 일반 북한 주민에 비해 남한의 법과 제도를 더 기꺼이 수용하려 할 수 있다.

3. 종족적 요인: 세부요인

남북한과 동서독의 종족적 요인을 이루는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표 5>에 따르면 서독의 경우, 종족적 정체성이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에 증가한다. 그 이유는 거주기간과 시민권 여부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동독지역의 경우, 종족적 요인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전 분야에 걸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1995년에는 종족적 요인의 분포가 우측으로 치우쳤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정규분포에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다(부록 그림1).

<표 5>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종족적 요인을 평가하는 경우, 출생과 시민권 여부가 장기 거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출생지역의 중요성은 2018년에 들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남한 사회가 인종적으로 보다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시민권, 장기거주, 출생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

〈표 5〉 독일과 한국의 종족적 세부요인

국가	1995	2003	2013	2018	1995	2003	2013	2018	1995	2003	2013	2018
	태어난 것				오래 거주한 것				시민권이 있는 것			
서독지역	2.5	2.63	2.6		2.75	2.74	2.88		3.11	3.05	3.12	
동독지역	2.69	2.73	2.72		2.89	2.8	2.83		3.23	3.11	3.12	
남한 주민		3.16	3.23	3.04*		2.92	2.97	2.92*		3.32	3.42	3.38*
북한이탈주민				3.15				3.27				3.58

* 남한 주민의 경우 2018년, 2019년 평균값.

출처: GESIS ISSP,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동 기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출생으로써는 스스로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거주 기간 면에서도 불리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

4. 시민적 요인: 세부요인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과 동서독에 있어 시민적 요인을 이루는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3년에 서독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한편 동독의 경우, 언어의 중요성은 2000년대에 더 증가했지만, 소속감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3년 동독지역에서 법·제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이 2003년에 비해 더 높아졌다.

남한 출신 주민의 경우도 법·제도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증가했다. 반면 언어 구사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2018년의 경우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민적 정체성은 독일이 한국에 비해 더 높지만, 국민임을 느끼는 항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는 한국에서 더 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언어를 구사

〈표 6〉 독일과 한국의 시민적 세부요인

국가	1995	2003	2013	2018	1995	2003	2013	2018	1995	2003	2013	2018
	언어를 구사하는 것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				독일인/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서독지역	3.38	3.55	3.63		3.43	3.28	3.46		3.06	2.93	3.01	
동독지역	3.33	3.53	3.56		3.29	3.11	3.34		3.03	2.89	2.87	
남한 주민		3.34	3.35	3.18*		2.98	3.05	3.4*		3.47	3.49	3.29*
북한이탈주민				3.33				3.44				3.39

* 남한 주민의 경우 2018년, 2019년 평균값.

출처: GESIS ISSP,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동 기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토대로 저자 작성.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남한 주민과 비슷한 반면,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남한 출신 주민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소속감, 즉,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남한 출신 주민과 비슷하며 독일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5. 차감형과 합산형 모형

이 절에서는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두 변수 간의 비율인 차감형(시민적 요인/종족적 요인) 모형과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합산한 합산형(시민적 요인+종족적 요인)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표 7〉에 나타난 추이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동서독 간 차감형 변수의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부록 표 3〉에 따르면 2013년에도 여전히 서독지역과 동독지역 간의 통계적 차이가 5%의 수준에서 유의하다. 반면 합산형 변수는 양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시간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 한국의 경우 차감형과 합산형 모두 양 집단의 차이가 관찰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시민적 요인보다 종족적 요인을 보다 중시하지만

그 개별 요인을 중시하는 정도는 남한 주민에 비해 높다.

〈표 7〉 독일과 한국의 차감형 모형과 합산형 모형

국가	1995	2003	2013	2018	1995	2003	2013	2018
	차감형 모형				합산형 모형			
	(시민적 요인/종족적 요인)				(시민적 요인+종족적 요인)			
서독지역	1.27	1.24	1.24		6.07	6.07	6.24	
동독지역	1.15	1.16	1.19		6.15	6.06	6.15	
남한 주민		1.07	1.06	1.08*		6.40	6.50	6.40*
북한이탈주민				1.03				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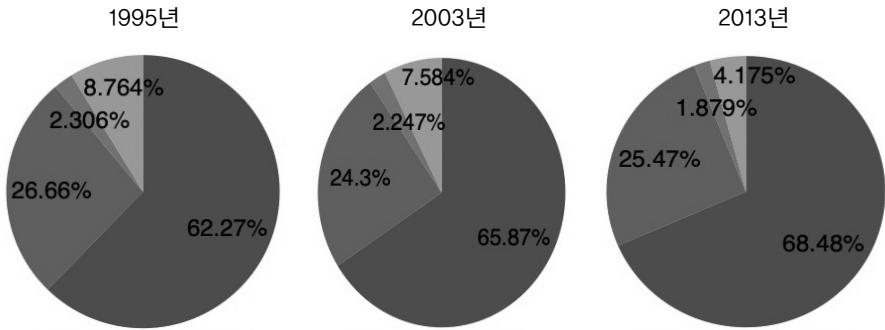
* 남한 주민의 경우 2018년, 2019년 평균값.

출처: GESIS ISSP,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동 기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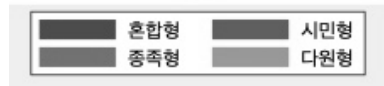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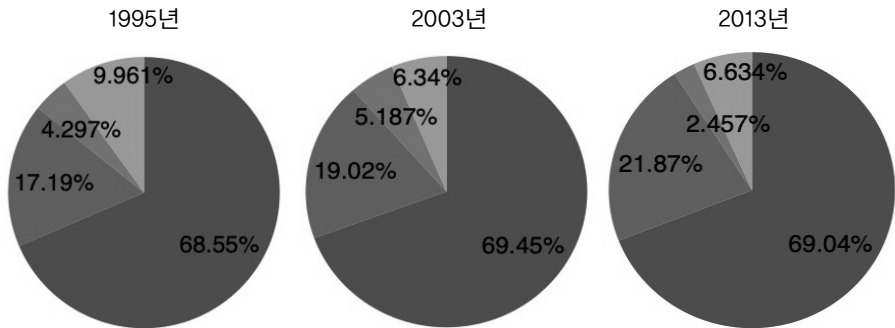
그리고 4분형 모형에 따라, 두 요인이 모두 높은 혼합형(mixed), 시민적 요인이 높고 종족적 요인이 낮은 시민형(civic), 시민적 요인이 낮고 종족형 요인이 높은 종족형(ethnic), 두 요인 모두 낮은 다원형(plural)으로 구분하여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5〉와 같이 동독과 서독의 시민형과 종족형 비중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추세이다. 특히 시민형 비중의 차이는 통일 초기에 컸지만 최근에 두 지역 간 차이가 사라진 것이 관찰된다. 한국의 경우 데이터의 한계로 2018년만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만 비교할 수 있다. 우선 남한 주민은 혼합형의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형의 비중은 작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85%가 혼합형이며, 시민형의 비중은 남한 주민보다 낮고, 종족형의 비중은 남한 주민보다 높다.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특성상 한국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형과 종족형의 비중이 남한 주민과 비슷하게 수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5〉 독일과 한국의 유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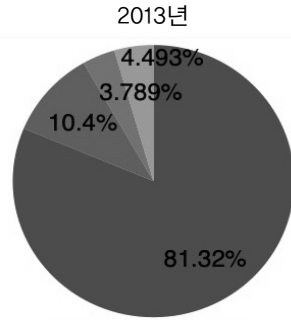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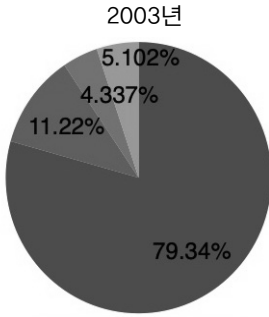
〈서독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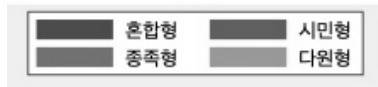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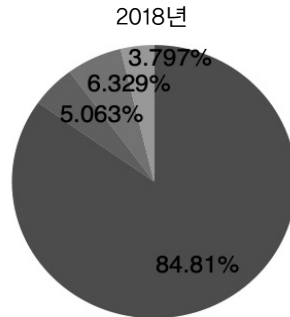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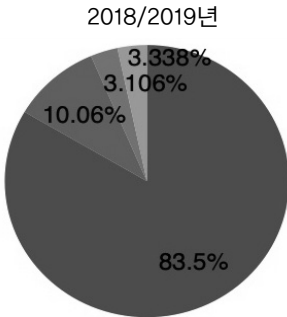
〈동독 주민〉



〈남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V. 국민정체성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 장에서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종족적·시민적 요인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2018년, 2019년 통일의식조사와 2018년 북한이탈주민 조사자료 중 18세~65세 샘플 (남한 주민 2,157명, 북한이탈주민 79명)을 사용하였으며, 통일의식과 관련된 다음의 세 종속변수를 선택하여 이 변수와 국민정체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통일의 필요성이다. 이에 사용된 문항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보기 중 하나의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문항은 통일이 남한에 주는 편익이다. 이는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의 보기로서는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제시되었다.

세 번째 종속변수는 통일이 자신에 주는 편익이다. 이에 사용된 문항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서 둘째 문항과 동일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¹¹⁾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당위와 편익으로 분해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서 통일은 당위적으로

11) ‘통일의 필요성’ 변수는 다섯 척도, ‘통일 편익’에 대한 두 변수는 네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세 종속변수 모두 높은 값일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익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변환하였다.

옳다고 믿거나 혹은 통일은 공동체와 개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응답자가 통일은 지지하는 반면 공동체나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통일을 당위로 이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회귀분석에서는 특정 변수가 통일의 필요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통일의 편익을 반영하는 종속변수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반면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로서 공동체나 개인에게 주는 편익의 관점을 제시한다면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편익을 이루는 수단임을 의미한다. 이 경우 회귀분석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결과뿐 아니라 공동체나 개인에게 주는 편익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 중 적어도 하나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종족적 요인이 통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과 부정일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만약 혈연과 분단 이전 단일 국가로서의 역사적 경험을 중시한다면 종족적 요인으로서의 국민정체성과 통일의 필요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반면 1945년 남북 분단 이후의 역사적 경험이 중시된다면 종족적 요인은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종족적 요인의 긍정, 부정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종족적 요인과 통일 필요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교육이나 소득에 의하여 매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족적 요인과 국민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민적 요인과 통일의 필요성은 당위적이라기보다 편익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시민적 요인 중에서 법과 제도의 수용, 국민이라는 감정, 그리고 동일 언어의 사용은 국민정체성 확립의 조건인 동시에 공동체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에 기여할 태도를 갖추고 그 수단을 획득하는 것을 국민정체성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공동체에 경제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가능

성이 높다. 이 경우 통일의 필요성뿐 아니라 그 편익을 보여주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시민적 요인은 종속변수와 양의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표 8〉 통일의식조사 표본 기초통계 (N=2,23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통일이 필요함	3.60	1.08	1	5
통일이 국가에 이익을 줌	2.70	0.80	1	4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줌	2.22	0.79	1	4
종족적 요인	3.12	0.56	1	4
태어난 것	3.04	0.75	1	4
오래 거주한 것	2.93	0.77	1	4
시민권이 있는 것	3.39	0.67	1	4
시민적 요인	3.29	0.50	1	4
언어를 구사하는 것	3.19	0.68	1	4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	3.40	0.67	1	4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3.29	0.66	1	4
유형 (비율)				
혼합형	0.84	-	-	-
시민형	0.10	-	-	-
종족형	0.03	-	-	-
다원형	0.03	-	-	-
출신 (비율)				
남한 주민	.96	-	-	-
북한이탈주민	.04	-	-	-
성별 (비율)				
남성	0.51	-	-	-
여성	0.49	-	-	-
혼인상태 (비율)				
기혼	0.69	-	-	-
사별	0.01	-	-	-
이혼/별거	0.02	-	-	-
미혼	0.29	-	-	-

학력 (비율)				
고등학교 졸업 미만	0,06	-	-	-
고등학교 졸업	0,45	-	-	-
대학교 졸업 이상	0,49	-	-	-
나이	42,96	13,00	19	65

〈표 8〉은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기초통계표이다. 통일의식에 관하여는 평균값이 통일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표본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 값은 “반반/그저 그렇다(3점)”와 “약간 필요하다(4점)”의 중간 정도이며, 통일의 편익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이익을 준다는 견해보다 국가에 이익을 준다는 견해가 평균적으로 더 강하다. 국민정체성의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 중에서는 종족적 요인보다 시민적 요인이 다소 중요하게 평가되었고, 종족적 요인 중에서는 시민권이 있는 것, 시민적 요인 중에서는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전체 표본 중 약 84%가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이 모두 높은 혼합형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형의 비중이 약 10%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1%, 49%이며, 평균 나이는 약 43세이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이 약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9〉과 〈표 10〉은 종속변수의 특성상 순서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9〉는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종족적 요인은 통일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모형 (1)의 결과는 종족적 요인이 클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종족적 요인만 독립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을 보여주는 모형 (2)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적 요인으로 국민정체성을 이해하는 의식은 통일의 필요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종족적 요인과 함께 독립변수로 들어간 모형 (1)의 회귀식과 종족적 요인을 배제하고 시민적 요인만 독립변수로 포함된 모형 (2)의 회귀식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적 요인은 통일은 남한에 이익이 된다고 믿는 의식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교육 수준과 성별, 또 혼인 유무와 형태를 통제된 상태에서 얻어진 것으로 시민적 요인이 다른 변수와 매개되지 않고 직접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민적 요인의 세부 항목과 통일의 필요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모형 (4)에서는 세부 항목 중 법과 제도의 수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의 계수값은 양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어의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이 통일이 국가와 자신에게 주는 편익을 회귀분석한 것이 모형 (5)-(12)이다. 종족적 요인은 국가와 개인의 편익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민적 요인은 통일이 국가에 미치는 편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국민정체성에 있어서 시민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응답자들은 통일의 공동체적 편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시민적 요인의 국민정체성은 국민됨에 있어 일종의 자격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이 자격을 갖춘 자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러한 상관관계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모형 (8)의 회귀식 결과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통일의 편익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0〉의 결과도 시민적 요인이 통일의 필요성 및 남한 전체의 이익

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한 국민정체성의 네 가지 유형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을 때 모형 (1)과 (4)의 결과는 기준 집단(reference group)인 시민형(civic)과 비교하여 혼합형(mixed)과 다원형(plural)에 응답자가 속할 때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통일이 남한 사회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다. 차감형과 합산형 변수를 사용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즉, 모형 (2)와 (5)의 분석 결과에서 종족형 대비 시민형의 평균값이 증가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과 통일이 남한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증가한다.

〈표 11〉은 종족적, 시민적 요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교차항 분석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하여 남한 출신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의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을 더 지지하지만 시민적, 종족적 유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이 남한이나 자신에 주는 이익 면에서도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형과 차감형을 이용하여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표 12〉의 결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은 남한 출신 주민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통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종족적 요인이 아닌 시민적 요인과 양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통일 의식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시민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민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반면 단일 민족이나 단일 혈연을 강조하는 종족적 국민정체성은 통일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즉,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남한의 국민이 되는 것이 생득적 요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 가능함을 강조하고 '우리'와 '너희'의 경계를 허물되 법과 제도의 균일성을 전제하고 공동 언어를 사용하며 한국인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통일 의식 함양에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9〉 종족적/시민적 요인이 통일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1) (2) (3) (4)				(5) (6) (7) (8)				(9) (10) (11) (12)			
	통일 필요				국가에 이익				개인에 이익			
종족적 요인	-0,088*	-0,026			-0,135***	-0,051			0,003	0,031		
	(-1,917)	(-0,651)			(-2,872)	(-1,234)			(0,060)	(0,756)		
시민적 요인	0,143***		0,096**		0,193***		0,121***		0,066		0,067	
	(2,807)		(2,151)		(3,716)		(2,662)		(1,261)		(1,469)	
언어를 구사하는 것				-0,030				0,012				0,037
				(-0,845)				(0,334)				(1,002)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				0,067*				0,029				-0,029
				(1,788)				(0,770)				(-0,760)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0,059				0,079**				0,058
				(1,502)				(1,971)				(1,442)
나이	0,009	0,009	0,009	0,011	0,013	0,012	0,011	0,013	-0,005	-0,005	-0,005	-0,003
	(0,634)	(0,586)	(0,580)	(0,724)	(0,838)	(0,776)	(0,753)	(0,874)	(-0,303)	(-0,324)	(-0,301)	(-0,212)
나이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32)	(0,091)	(0,069)	(-0,069)	(-1,003)	(-0,923)	(-0,941)	(-1,055)	(0,166)	(0,193)	(0,165)	(0,081)
남성 (터미)	-0,173***	-0,174***	-0,173***	-0,179***	-0,131***	-0,132***	-0,132***	-0,136***	-0,126***	-0,126***	-0,126***	-0,128***
	(-3,789)	(-3,809)	(-3,795)	(-3,919)	(-2,812)	(-2,838)	(-2,829)	(-2,919)	(-2,673)	(-2,682)	(-2,673)	(-2,712)
사별 (터미)	-0,674**	-0,684**	-0,673**	-0,661**	-0,213	-0,225	-0,211	-0,214	-0,179	-0,183	-0,179	-0,196
	(-2,215)	(-2,245)	(-2,211)	(-2,169)	(-0,677)	(-0,718)	(-0,672)	(-0,681)	(-0,558)	(-0,570)	(-0,559)	(-0,612)
이혼 (터미)	0,193	0,190	0,189	0,196	-0,039	-0,041	-0,043	-0,039	-0,022	-0,022	-0,021	-0,024
	(1,166)	(1,145)	(1,141)	(1,184)	(-0,231)	(-0,245)	(-0,256)	(-0,236)	(-0,127)	(-0,132)	(-0,127)	(-0,141)
미혼 (터미)	-0,024	-0,023	-0,028	-0,023	-0,004	-0,003	-0,011	-0,008	-0,074	-0,073	-0,074	-0,076
	(-0,308)	(-0,297)	(-0,364)	(-0,295)	(-0,052)	(-0,037)	(-0,137)	(-0,102)	(-0,918)	(-0,914)	(-0,917)	(-0,942)
고등학교 졸업 (터미)	0,036	0,039	0,033	0,023	0,069	0,073	0,065	0,058	0,255**	0,257**	0,255**	0,251**
	(0,330)	(0,355)	(0,306)	(0,214)	(0,621)	(0,655)	(0,588)	(0,518)	(2,267)	(2,283)	(2,267)	(2,224)
대학교 졸업 이상 (터미)	0,082	0,086	0,082	0,069	0,029	0,036	0,030	0,022	0,229*	0,232*	0,229*	0,226*
	(0,695)	(0,738)	(0,698)	(0,584)	(0,240)	(0,301)	(0,252)	(0,180)	(1,900)	(1,925)	(1,899)	(1,870)
표본 수	2,236	2,236	2,236	2,234	2,236	2,236	2,236	2,234	2,236	2,236	2,236	2,234

괄호 안: z-통계값. *** p<0,01, ** p<0,05, * p<0,1

〈표 10〉 유형별 국민정체성이 통일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1)	(2)	(3)	(4)	(5)	(6)	(7)	(8)	(9)
	통일 필요			국가에 이익			개인에 이익		
(비교집단=시민형)									
혼합형 (더미)	-0.171** (-2,236)			-0.162** (-2,077)			-0.001 (-0,013)		
종족형 (더미)	-0.214 (-1,459)			-0.151 (-1,010)			0.078 (0,522)		
다원형 (더미)	-0.286** (-1,998)			-0.278* (-1,913)			-0.080 (-0,545)		
시민적 요인/ 종족적 요인		0.362*** (3,441)			0.527*** (4,848)			0.123 (1,139)	
시민적 요인 + 종족적 요인			-0.009 (-0,365)			-0.003 (-0,130)			0.006 (0,248)
북한이탈주민 (더미)	2,401*** (11,447)	2,411*** (11,484)	2,388*** (11,400)	2,295*** (12,913)	2,317*** (13,043)	2,285*** (12,865)	2,514*** (16,023)	2,522*** (16,072)	2,514*** (16,018)
나이	0.016 (1,076)	0.017 (1,152)	0.015 (0,997)	0.019 (1,222)	0.021 (1,363)	0.018 (1,150)	0.003 (0,198)	0.004 (0,252)	0.003 (0,196)
나이제곱	0,000 (0,009)	-0,000 (-0,049)	0,000 (0,080)	-0,000 (-0,994)	-0,000 (-1,109)	-0,000 (-0,931)	0,000 (0,159)	0,000 (0,117)	0,000 (0,161)
남성 (더미)	-0.187*** (-4,043)	-0.183*** (-3,964)	-0.183*** (-3,957)	-0.145*** (-3,068)	-0.141*** (-2,995)	-0.141*** (-2,994)	-0.139*** (-2,910)	-0.138*** (-2,890)	-0.137*** (-2,889)
사별 (더미)	-0.591* (-1,934)	-0.600** (-1,963)	-0.614** (-2,009)	-0.153 (-0,485)	-0.156 (-0,496)	-0.175 (-0,557)	-0.121 (-0,375)	-0.123 (-0,380)	-0.126 (-0,391)
이혼 (더미)	0.168 (0,990)	0.170 (1,003)	0.161 (0,949)	-0.116 (-0,681)	-0.115 (-0,676)	-0.119 (-0,703)	-0.107 (-0,620)	-0.110 (-0,640)	-0.112 (-0,648)
미혼 (더미)	-0.039 (-0,491)	-0.036 (-0,455)	-0.041 (-0,513)	-0.018 (-0,225)	-0.013 (-0,155)	-0.020 (-0,246)	-0.090 (-1,095)	-0.086 (-1,048)	-0.088 (-1,078)
고등학교 졸업 (더미)	0.083 (0,749)	0.088 (0,788)	0.086 (0,770)	0.119 (1,047)	0.124 (1,093)	0.121 (1,064)	0.337*** (2,945)	0.338*** (2,956)	0.337*** (2,946)
대학교 졸업 이상 (더미)	0.291** (2,418)	0.293** (2,440)	0.292** (2,426)	0.226* (1,845)	0.229* (1,874)	0.228* (1,860)	0.491*** (3,982)	0.493*** (3,998)	0.492*** (3,992)
표본 수	2,236	2,236	2,236	2,236	2,236	2,236	2,236	2,236	2,236

괄호 안: z-통계값. *** p<0.01, ** p<0.05, * p<0.1

〈표 11〉 종족적 및 시민적 요인의 남북집단 간 영향력 차이: 교차항 분석

	(1) 통일 필요	(2) 국가에 이익	(3) 개인에 이익
종족적 요인	-0.121 (-0.259)	-0.591* (-1.687)	-0.151 (-0.469)
북한이탈주민 (더미)* 종족적 요인	-0.013 (-0.027)	0.398 (1.171)	0.095 (0.305)
시민적 요인	0.245 (0.497)	0.316 (0.850)	-0.191 (-0.565)
북한이탈주민 (더미)* 시민적 요인	-0.096 (-0.198)	-0.115 (-0.320)	0.248 (0.767)
북한이탈주민 (더미)	2,837** (2,116)	1,369 (1,353)	1,347 (1,551)
표본 수	2,236	2,236	2,236

괄호 안: z-통계값. *** p<0.01, ** p<0.05, * p<0.1

〈표 12〉 합산형 및 차감형 정체성의 남북집단 간 차이: 교차항 분석

	(1) 통일 필요	(2)	(3) 국가에 이익	(4)	(5) 개인에 이익	(6)
(시민적 요인 + 종족적 요인)*북한이탈주민 (더미)	-0.040 (-0.205)		0.156 (1.032)		0.170 (1.312)	
시민적 요인 + 종족적 요인	0.032 (0.158)		-0.164 (-1.039)		-0.170 (-1.241)	
(시민적 요인/종족적 요인)*북한이탈주민 (더미)		0.128 (0.106)		-0.876 (-1.051)		0.241 (0.304)
시민적 요인/종족적 요인		0.233 (0.190)		1.417* (1.659)		-0.123 (-0.151)
표본 수	2,236	2,236	2,236	2,236	2,236	2,236

괄호 안: z-통계값. *** p<0.01, ** p<0.05, * p<0.1

Ⅵ.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ISSP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정체성을 종족적 요인, 시민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남한과 동서독의 국민정체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ISSP 데이터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동서독과 남한 출신 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의 수준과 유형, 그리고 추세를 비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를 통해 국민정체성과 통일 필요성, 그리고 국민정체성과 통일의 편익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모두 강조하는 혼합형(Mixed)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종족적 요인을 시민적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서독에 있어 국민정체성의 차이는 동독지역 주민의 시민적 요인 수준이 서독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셋째,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정체성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시민형 비중이 낮고, 종족형 비중이 높았다. 넷째,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정체성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민적 요인이 강할수록 '통일의 필요', '통일의 집단이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단일 민족'을 통일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단일 민족을 강조할수록 지난 70년 동안의 분단과 대립의 기억이 그 이전의 단일 국가로서의 역사적 경험을 압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분단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시민적 요인이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 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바람직한 통일정책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결과는 법과 제도의 균일성이 전제되고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인식이 증가해야 한국인의 통일 지지도가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즉, 한국의 국민은 단일 민족이라는 당위성에 의한 무조건적 통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남북주민이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조건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에 비해 종족적 요인을 더 중시한다는 발견은 남북 주민 사이 통일 의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했고 또 남한 사회에 부분적으로 동화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북 주민 사이 국민정체성에 관한 실제 차이는 이보다 현저히 클 수도 있다. 즉 북한 이탈주민은 종족적 요인을, 남한 주민은 시민적 요인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은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갈등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서독의 경우에도 이러한 차이가 존재했으나 통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독의 국민정체성이 수렴했다는 사실은 이 갈등이 정책적 대응과 사회·경제적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동서독의 사례와 같이 국민정체성이 점진적으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시민형 비중은 늘어나는 한편, 종족형 비중은 감소되어야 한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시민적 요인의 증가에 기여하는 '소득'과 '교육 수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들에 대한 구직 지원과 재교육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시민적 요인을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윤인진,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어울누리 학술연구 1)』, 한국학술정보/이담북스, 2010.
- 정기선 외 공저,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0.
- 정동준 외 공저,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 Rogers Brubaker, ed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Emma Campbell, eds., *South Korea's New Nationalism: The End of "One Korea"?*, Boulder: FirstForum Press, 2016.
- Sun-Ki Chai, *Choosing an identity*,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s, 2001.
- Liah Greenfeld,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2.
- Hans Kohn, eds.,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s and Background*, New York: Macmillan, 1944.
- Gi-Wook Shin, eds.,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책성,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동아시아연구원, 2007.
- 권수현·홍은정,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특징과 결정요인-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연구』 22권 1호, 2018, 5~38쪽.
- 김병연, 「청년세대의 통일외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박영사, 2019, 143~171쪽.
-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55권, 2011, 143~192쪽.
- 정기선·이선미, 「기획특집: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19권 1호,

2011, 45~72쪽.

최현,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2호, 2007, 147~173쪽.

Mark James Barnard, "The past becomes the present: German national identity and memory since reunific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lford, 2008).

Karl Heinz Bohrer, "Why we are not a nation, and why we should become one" *New German Critique*, no. 52, (Winter 1991), pp. 72-83.

Kenneth Bollen and Juan Diez Medrano, "Who are the Spaniards? Nationalism and identification in Spain" *Social Forces*, vol. 77, no. 2 (Dec. 1998), pp. 587-621.

Edna Bonacich,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The split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7, no. 5 (Oct. 1972), pp. 547-559.

Emma Campbell, "The end of ethnic nationalism? Changing con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belonging among young South Koreans" *Nations and Nationalism*, vol. 21, no. 3 (Jul. 2015), pp. 483-502.

Sun-Ki Chai, (2005). "Predicting ethnic bounda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21, no.4 (Sep. 2005), pp. 375-391.

Liah Greenfeld and Daniel Chirot, Nationalism and aggression, *Theory and Society* vol. 23, no. 1 (Feb. 1994), pp. 79-103.

Shang E. Ha and Seung-Jin Jang, "National identity in a divided nation: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155 (Nov. 2016), pp. 109-119.

Anthony F. Heath and James R. Tilley, "British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vol. 7, no. 2 (2005), pp. 119-132.

Mikael Hjerm, "National identity: A comparison of Sweden, Germany and Australi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24, no. 3 (Jun. 2010), pp. 451-469.

Hol Ok Jeong, "A new comparison of the East and West: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vol. 25,

no. 2 (Apr. 2016), pp. 206-219.

Frank L. Jones and Philip Smith, (2001a).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7, no. 2 (Jun. 2001), pp. 103-118.

_____. (2001b). "Diversity and commonality in national identiti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cross-national patterns". *Journal of Sociology*, vol. 37, no. 1 (Mar. 2001), pp. 45-63.

Jack Billiet, Bart Maddens and Roeland Beerten, "National identity and the attitude towards foreigners in multinational states: The case of Belgiu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24, no. 2 (Jun. 2003), pp. 45-60.

Robert M. Kunovich,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4, no. 4 (Aug. 2009), pp. 573-593.

Samuel Pehrson, Vivian L. Vignoles and Rupert Brown, "National identification and anti-immigrant prejudice: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of national defini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72, no. 1 (Mar. 2009), pp. 24-38.

부록

부록 <표 1> ISSP의 정체성 설문조사 기초통계

구분	질문	변수값	국가구분	1995		2003		2013		
				mean	(sd) N	mean	(sd) N	mean	(sd) N	
종족적 요인	태어난 것	1~4	한국 (남한 주민)	-	-	3,211 (0,784)	1,311	3,272 (0,805)	1,290	
			서독지역	2,597 (1,065)	1,243	2,727 (0,979)	816	2,667 (0,951)	1,145	
			동독지역	2,779 (1,056)	598	2,820 (0,943)	427	2,832 (0,912)	518	
	오래 거주하는 것	1~4	한국 (남한 주민)	-	-	2,973 (0,856)	1,310	3,024 (0,859)	1,290	
			서독지역	2,814 (0,950)	1,224	2,823 (0,881)	819	2,925 (0,876)	1,158	
			동독지역	2,965 (0,923)	580	2,898 (0,865)	430	2,965 (0,854)	521	
	시민권이 있는 것	1~4	한국 (남한 주민)	-	-	3,349 (0,712)	1,306	3,446 (0,721)	1,291	
			서독	3,161 (0,912)	1,231	3,127 (0,864)	827	3,161 (0,851)	1,153	
			동독	3,287 (0,836)	592	3,205 (0,799)	430	3,233 (0,794)	523	
	시민적 요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	1~4	한국 (남한 주민)	-	-	3,370 (0,721)	1,310	3,378 (,742)	1,292
				서독	3,424 (0,733)	1,245	3,583 (0,635)	837	3,643 (0,614)	1,164
				동독	3,384 (0,753)	595	3,565 (0,664)	432	3,607 (0,619)	525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		1~4	한국 (남한 주민)	-	-	3,021 (0,780)	1,302	3,093 (0,754)	1,287	
			서독	3,452 (0,693)	1,230	3,304 (0,709)	825	3,484 (0,675)	1,162	
			동독	3,332 (0,753)	574	3,119 (0,752)	427	3,363 (0,699)	520	
독일인/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1~4	한국 (남한 주민)	-	-	3,479 (0,659)	1,312	3,498 (0,670)	1,289	
			서독	3,161 (0,912)	1,231	2,998 (0,902)	819	3,061 (0,862)	1,146	
			동독	3,287 (0,836)	592	2,962 (0,897)	422	2,970 (0,849)	515	

주: 1: 매우 중요하지 않다. ~ 4: 매우 중요하다.

부록 <표 2> 회전된 국민정체성 요인행렬 및 고유값

	요인1	요인2	고유값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0.845	0.034	0.285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0.761	0.155	0.397
한국 국적을 갖는 것	0.520	0.501	0.478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0.482	0.483	0.534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0.070	0.810	0.340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0.105	0.795	0.357

주: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베리맥스 직교회전

부록 <표 3> 독일과 한국의 차감형 변수와 합산형 변수 간 수렴도 t-검정결과 독일 (1995, 2003, 2013년)

차감형 정체성 (Civic/Ethnic)

	N (서독주민)	N (동독주민)	평균 (서독주민)	평균 (동독주민)	차이	표준오차	t-값	p-value
1995	1064	502	1.274	1.148	.126	.022	5.85	0
2003	700	345	1.242	1.157	.086	.026	3.35	.001
2013	942	401	1.244	1.192	.053	.022	2.4	.016

합산형 정체성 (Civic+Eth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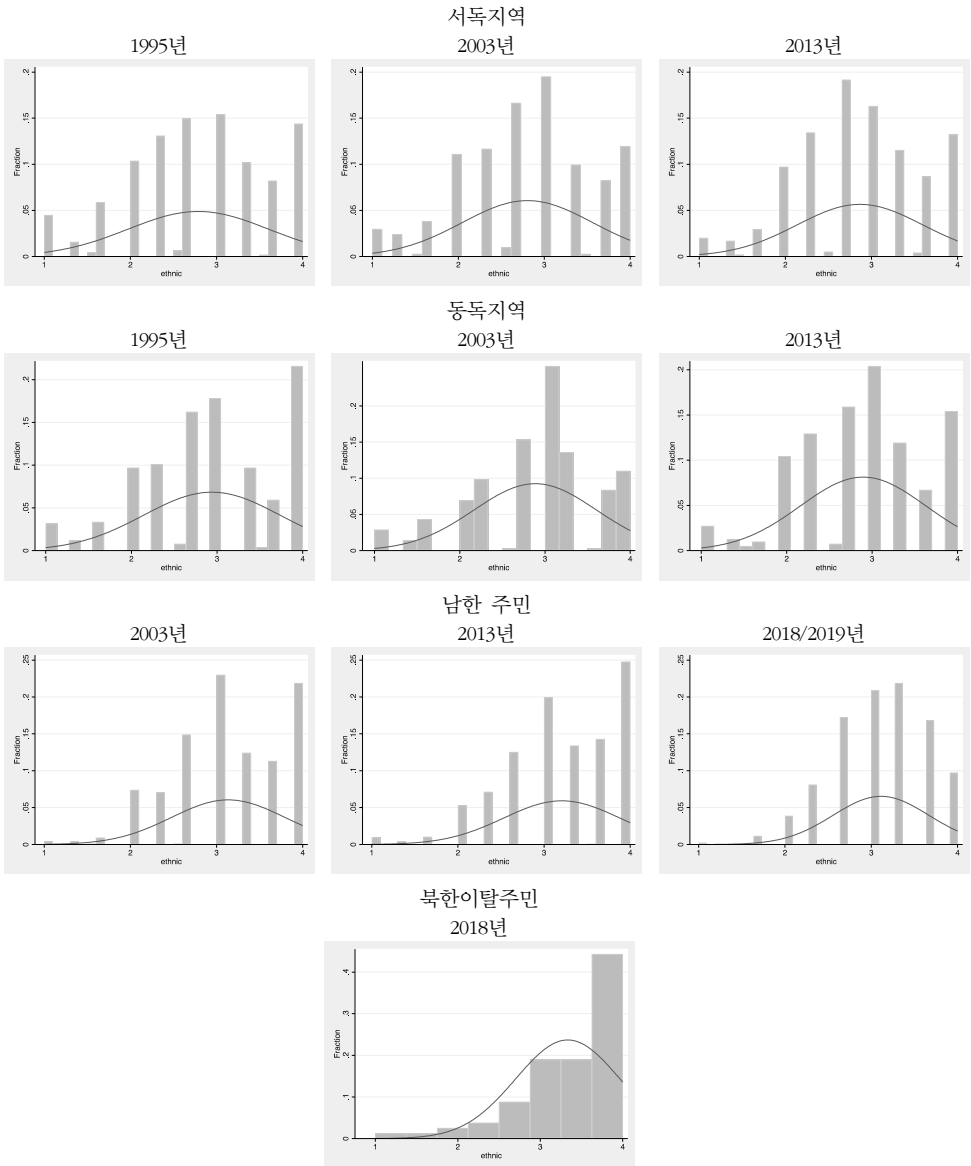
	N (서독주민)	N (동독주민)	평균 (서독주민)	평균 (동독주민)	차 이	표준오차	t-값	p-value
1995	1064	502	6.072	6.152	-.081	.07	-1.15	.25
2003	700	345	6.067	6.064	.003	.076	.05	.973
2013	942	401	6.237	6.154	.084	.066	1.25	.203

한국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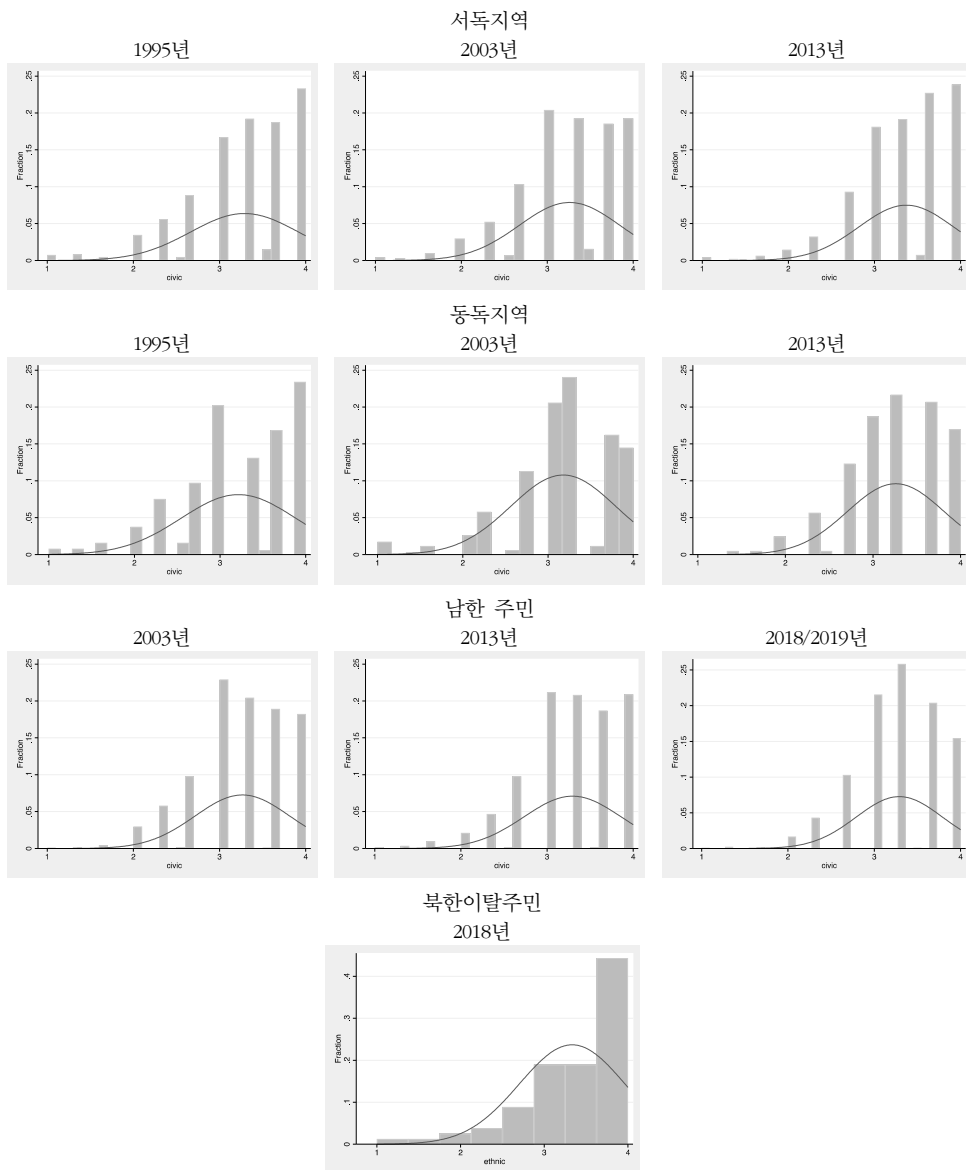
	N (남한 주민)	N (탈북민)	Mean (남한 주민)	Mean (탈북민)	차이	표준 오차	t-값	p-value
시민적 요인/ 종족적 요인	2157	79	1.082	1.036	.046	.025	1.85	.064
시민적 요인 + 종족적 요 인	2157	79	6.402	6.724	-.322	.104	-3.1	.002

*한국인의 경우 2018년, 2019년 자료 사용.

〈그림 1〉 동·서독과 한국의 종족적 요인 분포



〈그림 2〉 동·서독과 한국의 시민적 요인 분포



National identity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s and Germans

Kim, Byung-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 Seung-Ho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im, Seong Hee (University of Suwon)

Abstract

Based on the data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and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s o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 this article compares the national identities of the following four groups: native South Koreans,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East Germans and West Germans. Furthermore,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s' national identities and their attitudes towards Korean reunification.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ns have a higher proportion of the mixed type, which emphasizes both ethnic and civic factors, compared with Germans. Second, North Korean refugees have less civic and more ethnic factors than South Koreans. Third, East Germans' national identity converges to that of West Germans over time. Finally, a stronger civic factor is associated with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reunification while an ethnic factor does not demonstrate such association.

Keywords: National Identity, Civic Factor, Ethnic Factor, Unification

김병연(Kim, Byung-Yeon)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서 현재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사와 석사를 거쳐 옥스퍼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북한 경제, 체제이행, 경제발전 및 응용계량경제이다. 주요 저서로서는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Cambridge Univ. Press, 2017)가 있으며 북한 및 체제이행 경제 관련 다수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대한민국 학술원상, 서울대 학술연구상,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T.S. Ashton Prize 등을 수상했다.

정승호(Jung, Seung-Ho)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KIEP, 한국은행에서 북한경제, 남북경제통합 등에 대해 연구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공저, 2019), 「Dollarization, Seigniorage, and Prices: The Case of North Korea」(공저, 2017) 등 다수가 있다.

김성희(Kim, Seong Hee)

수원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제도, 특히 사회적 신뢰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Migration and trust: Evidence from West Germany after unification」(공저, 2020), 「Market activities and trust of North Korean refugees」(공저, 2019) 등이 있다.